

# 日本社會黨의 安全保障政策

高忠錫\* · 金振昊\*\*

## I. 序 論

제2차대전후 일본에 주둔한 聯合軍總司令部는 '일본은 재차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것'이라는 방침하에서 철저하게 軍國主義體制의 파괴와 함께 民主化政策을 추진하였다. 특히 점령 당시 太平洋戰爭으로 막대한 희생을 입었던 미국의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계심은 대단히 강하였다.<sup>1)</sup>

미국의 경계심은 1946년 11월에 공포된 日本憲法 제9조(전쟁의 포기, 전력·교전권의 부인)의 규정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미국은 1947년 3월 트루만독트린(Truman Doctrine)으로 동·서대립이 뚜렷해지자, 일본에서 당초의 민주화와 非軍事化라는 2개의 점령정책은 韓國戰爭의 발발을 기점으로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의 極東戰略의 거점 및 동맹국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自衛力을 갖게 되었는데 전자는 日·美安保條約으로, 후자는 경찰예비대·보안대·자위대의 창설을 실현케 하였다.

---

\*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대학교 강사

1) Robert C. Christopher, "America and Japan: A Time for Healing", Foreign Affairs, Vol. 56. No.4. July, 1978.

2) 박충석, "미점령기의 개혁정치", 현대일본연구회(편), 「일본정치론」(서울: 박영사, 1983), pp.67~88.

이와 같은 미국의 對日本政策의 변경은 憲法 제9조와 관련을 가지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國論을 양분시켰다. 이러한 대립은 사법부에서도 나타났는데, 1959년 3월 東京地法의 伊達판사는 “안보조약에 근거를 둔 미국의 주둔은 위헌이다”라고 관시(砂川제일심 판결)하였고, 1973년 9월 삿포로地法은 “육·해·공의 각 자위대를 규모·장비·인력면에서 살펴볼 때 헌법 제9조 2항에 있는 육해공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함으로 위헌”이라는 판결(長沼제일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위헌판결은 항상 상급심에 의해 기각되었다.<sup>3)</sup>

지금까지 美國의 極東政策과 일본여당의 안전보장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를 해 온 것은 日本社會黨이었다. 1949년말 현재의 비무장중립정책을 외교방침으로 결정한 이래 약간의 동요와 분열이 있었지만, 시중일관 日·美安全條約과 自衛隊의 존재에 반대하는 世界社會主義 政黨 중에서도 특이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특히 黨內에서 地域集團安全保障을 찬성하는 民主社會黨이 분리된 이후 더욱 강력하게 정부 여당의 안전보장정책과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黨의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첫째는, 마르크스주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대립, 둘째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깊이 연관된 인맥적·파벌적 대립, 셋째는 평화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勢力均衡의 시비를 둘러싼 대립 등이 있는데, 日本社會黨의 安全保障政策은 위의 요소에 주의를 가짐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本稿에서는 일본사회당의 安全保障政策 즉, 非武裝中立論이 확립되는 과정을 세가지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살피고자 한다.

## II. 右派凋落과 ‘森戶·稻村論爭’

1940년 7월 6일에 黨해체에 발표한 社會大衆黨을 마지막으로 戰前의 合法無産政黨이 終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sup>4)</sup> 그러나 종전과 동시에 舊無産系陳營의 활동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社會主義 政黨의 결성을 시도하였다. 그 중에서 西尾未廣을 비롯한 水谷長三郎, 平野力三 등이 신당결성을 준비하여 1945년 11월 2일에 통일된 사회주의 정당인 日本社會黨이 태동하게 되었다.

일본사회당은 우파의 舊社民系와 좌파의 舊日無産系를 포함하는 단일사회주의 政黨이다. 이러한 성격의 정당결성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1936년 총선때 統一無産

3) 吉田忠雄(外) 共著, 「日本社會黨の政策を衝く」(東京:啓正社, 1989) 참조.

4) 昭和 초기 日本의 無産政黨은 社會民衆黨, 日本勞動黨, 勞動農民黨 등이 있었다.

政黨, 社會大衆黨의 급속한 상승에 대한 향수와 인상이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黨內的 사상적·인맥적인 다양성과 복잡성은 항상 문제의 發生原因이 되었다.

그래서 '日本社會黨'이라는 黨名 결정과정에서도 동당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반영되었다. 즉, 舊社民系에서는 '社會民主黨'이라는 黨名案을 내놓았지만, 舊日無産系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社會民主黨으로는 이데올로기의 폭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결국 표결결과 1표차로 '日本社會黨'이라는 당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綱領은 다음과 같다.<sup>5)</sup>

(1) 吾黨은 국민근로계급의 結合體로서의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 民主主義體制의 확립을 기한다.

(2) 吾黨은 資本主義를 배격, 社會主義를 실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한다.

(3) 吾黨은 일체의 軍國主義的 사상 및 행동에 반대하여 세계 각 국민의 협력을 얻어 항구적인 平和實現을 기한다.

左派주도체제하에 있던 1947년 4월의 제2회 총선거에서 日本社會黨은 143석을 획득하였고, 日本自由黨은 12석을 합하여 일약 제1당이 되었다. 그리고 民主黨과 國民協同黨도 포섭하여 片山哲을 수반으로 하는 社會黨聯立內閣을 성립시켰다. 社會黨은 각료선발에서 좌파지도자의 입각을 배제한 탓으로 左派는 당내 야당의 입장으로 전환, 활동하였다. 片山內閣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다가 1948년 국회에서의 예산안심의를 끝으로 좌파와의 의견불일치로 붕괴되었다. 정권욕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성립된 芦田內閣도 復興金融公庫의 汚職을 둘러싼 [昭和電工事件]에 의해서 7개월이라는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sup>6)</sup> 創黨 이래 자금조달을 담당했던 西尾도 [昭和電工事件]에 연되어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 제명되고(후에 無罪로 관명), 내각 실패의 책임을 지게된 편산은 1949년 1월의 총선거에서 낙선되고 말았다. 그리고 편산내각시 農務相職으로 파면당한 平野力三은 右派系의원 16명과 함께 社會黨을 떠났고, 國協黨을 탈당한 여러 인사들과 사회혁신당을 결성하였다. 이처럼 片山·戸田內閣이 붕괴됨에 따른 직·간접적인 우파 중심적인 지도력의 상실은

5) 楠精一郎(外), "日本社會黨の安全保障政策", 池井優(外) 共著, 「日本の政黨と外交政策: 國際的現實との落差」(東京: 慶應通信, 1987), p. 94에서 재인용.

6) Ibid., p. 95.

당내에서 右派優位가 붕괴되는 원인이 되었다.

1949년 1월 총선에서 48석의 의석을 얻은 사회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49년 4월에 열린 제4회 당대회에서는 애매한 당의 基本理念과 성격을〔運動方針〕을 통해서 명확히 하자는데 좌우양파가 동의하였다.〔運動方針〕起草委員인 좌파의 稻村順三은 草案에 대해 우파의 森戶辰男은 독자적으로 집필한 수정안을 委員會原案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양자간에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이 '森戶·稻村論爭'이다. 그 논점은 당기관지인〔社會思潮〕에 정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1) 黨의 思想的 입장,<sup>7)</sup> (2) 革命論,<sup>8)</sup> (3) 黨의 組織的 性格<sup>9)</sup> 등이었다.

한편 제4회 당대회의 초점은 '森戶·稻村論爭' 뿐만 아니라, 또한 書記長選舉였다. 투표결과 좌파에서 추천한 鈴木戊三郎이 우파의 淺沼稻次郎을 390표대 291표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中央執行委員會의 비율도 좌우양파 각 10, 중간파 5, 全國勞動組合會議準備會 대표 5로 구성되어 창당 이래 압도적이던 좌파우위가 무너지게 되었다.

우파 조락의 원인은 우파측의 리더쉽 결여와 총선거에서의 패배였고,<sup>10)</sup> 제4회 당대회까지 대량 입당한 共產黨批判 세력인 民主化同盟이 社會黨 좌파의 思想性에 동조하였기 때문이었다.<sup>11)</sup> 당시 民主化同盟의 대량 입당은 좌우세력의 균형을 변화시켜 논쟁에서 稻村을 지지하였고, 서기장 鈴木을 견제하는데도 일조하였다. 논쟁의 과정에서 당외의 山川均 등 노동이론가들은 稻村을 지지하는 論客들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제4회 당대회를 계기로 左派의원집단, 講和問題들을 둘러싼 左右分裂을 이끌어 황금기의 人脈이 형성되었다.

---

7) 森戶는 마르크스主義는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사회발전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과학적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稻村은 마르크스主義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하였다.

8) 森戶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혁을 주장하였고, 稻村은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장악과정을 혁명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절대 다수 획득, 내각장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9) 森戶는 노동자 정당뿐만 아니라 농민·근로대중·소시민 정당을 주장하였지만, 稻村은 노동자 정당 즉, 계급정당론을 역설했다.

10) 허달순, "일본사회당 연구", 「월간조선」(1988. 6), pp. 529~530.

11) 김승흠, "전후 일본의 사회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년 연례 학술회의 발표문 참조.

### Ⅲ. 講和論爭과 分裂

1949년 12월 4일 日本社會黨은 집행위원회에서 처음으로 公式對日講和에 대한 태도를(이후 '일반적 태도'라 함) 결정하였다. 이것은 (1) 全面講和, (2) 永世中立, (3) 軍事基地反對 등으로, 그 후 [平和3原則]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社會黨이 '일반적태도'를 결정한 시기에 당내에서는 좌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우파에 속한 職業外交官 출신인 會你益에 의해 起草된 것이다. 당시 동[기관지]는 "12월 1-4일의 中執委에서 전면강화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라고 보도하였다.<sup>12)</sup> 또한 1949년 11월 10일 參議院 本會議에서 우파의 논객 波多是 吉田首相에게 非武裝中立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였는데<sup>13)</sup> 당시 이러한 '일반적 태도가' 國益에 도움을 주었다는 국민 각층에 널리 퍼져있었다.

1949년 3월 맥아더는 "戰爭이 일어났을 경우 미국은 일본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역할은 태평양의 스위스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결코 일본을 同盟國이라 하여 이용하려는 생각은 없고, 일본이 중립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sup>14)</sup>

1950년 4월 26일 공산당을 제외한 [野黨外交對策協議會]가 '平和·永世中立·全面講和'를 주장하는 平和運動을 추진하였다.<sup>15)</sup> 당시 外務省 조약국장인 西村態雄에 의하면 1950년 11월 24일 美國務省이 [對日平和 7原則]을 발표하기에는 吉田首相의 책임하에, (1) 日·美安保條約方式, (2) 西北太平洋의 일정지역에서 무장철폐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일탈(disengagement) 방식인 2개의 조약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sup>16)</sup>

美國과 U·N에 대한 과도한 기대, 특히 U·N의 物理的 強制力이 수반되지 않는 講和問題는 효용성이 없다 하여 좌우양파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원인이 되었다.

'일반적 태도' 결정 1개월 뒤인 1950년 1월 사회당은 제1차 분열을 맞이하였다. 이 무렵 세력을 확대한 우파도 獨立青年同盟(獨靑)을 조직하여 좌파의 실질적인 부대인 黨青年部와 대치하였다. 이 때문에 青年문제는 좌우 대립의 대립의 초점이 되어, 1950년 1월 16일부터 개최한 제5회 당대회에서는 분열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12) 楠精一郎(외) 공저, op. cit., p. 103.

13) Ibid.

14) Ibid.

15) Ibid.

16) Ibid.

분열은 1949년 4월의 제4회 당대회 당대회의 '森戶·稻村論爭'과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동대회와 제6회 당대회에서는 좌우양과 공히 '일반적 태도'에는 일치된 승인을 하였다. 분열은 좌우 양파에 가담하지 않았던 淺沼稻次郎 등 중간파 국회의원들의 조정에 따라 3개월 후에는 양파간에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양파의 사상과 정책이 해소된 것이 아니고, 다만 선거대책상의 타협의 産物이었기 때문에 1년반 후의 제2차 분열을 이끈 內在的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회당은 강화문제에 관하여 일층 결속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50년 6월 25일 韓國戰爭이 발발하자, 당내에서는 미묘한 의견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해 7월 6일의 [中央執行委員會]에서는 '한국사태에 대한 당의 사태'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U·N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韓國戰爭을 "공산당의 革命戰略의 전개이다"라 하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짓고 비난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은 사회당의 태도는 경찰예비대창설과 때를 같이 하였다. 在日美軍 4個師團을 한국에 투입함으로써,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인원 7만 5천명의 경찰예비대의 창설이 요청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당은 7월 18일 [평화운동 촉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협의 결과 "이를 민주적 관할하에 둘 것과 이후에 군대화하는데 반대한다"는 등의 몇개의 조건을 붙여 발족 전부터 찬성하였다.

韓國戰爭은 급속히 조기강화를 움직이게 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極東의 세력안정을 위해 일본을 서방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트루만대통령은 9월 14일에 對日講和豫備交渉 개시를 지시하고 11월 24일에는 [對日講和 7原則]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강화에의 급속한 진전을 보이자, 社會黨에서는 강화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동요가 일어났다. 言論界의 많은 지식인들은 미국과의 단독강화에 적극반대 하였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인을 규합한 [平和問題談話會]였다. 同會가 시사한 원칙이나 이론은 그 후 사회당 강화지침에 기여하였다.

사회당에서는 재강화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재현되었다. 會你益의 [51년도 운동방침서]의 서설에는 (1) 세계 社會民主主義 세력의 경향은 중립적 태도를 포기해서 西歐陳營과의 군사동맹에 가입하고 제3세력의 입장을 버리고 있다. (2) 전면강화의 가능성이 커서, 單獨講和의 형태는 1951년 상반기 중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세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좌파는 당의 外交方針 변경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결국 12월 25일 외교위원회의 협의 결과 [平和 3原則]을 종래와 같이 견지할 것을 결의하

17) Ibid.

였다.<sup>18)</sup>

1951년 1월 19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7회 당대회에서 우파는 西村英一 등이 기초한 [外交方針테제]라는 제목으로 대회결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平和3原則]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全面講和·中立·軍事基地反對' 등의 3원칙이 현실정세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좌파가 재군비 반대결의안을 제출, 양파대립에 고심한 집행부는 [平和 3原則]을 기조로 한 外交方針 제안했다. 좌파는 자위권의 승인 및 재군비와는 별도로 하고 하여 대회전일 [全國代表者會議]를 개최, 재군비반대를 결의하여 青年部の 강한 저항에 부딪쳤으나 대회에서는 통일된 방침을 결정했다. 기존의 [平和 3原則]과 좌파의 재군비반대를 더하여 [平和 4原則]이 탄생되게 되었다. 그리고 공식이었던 委員長職에도 鈴木茂三郎이 취임하여, 中執委의 구성과 좌파 15, 우파 10, 중간파 5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청년이여 두 번 다시 총을 잡지말라. 부인이여 남편을 전쟁에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명연설이 본 대회에서의 鈴木위원장 취임연설 중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것이다.<sup>19)</sup>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비준을 놓고 사회당에서는 黨의사 결정을 위해 연일 회의를 열었다. 11명으로 구성된 外交委員會는 양조약 찬성 5, 양조약 반대 4, 강화조약 찬성·일미안보조약에는 반대 2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sup>20)</sup> 양파는 양조약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대립하였다. 우파는 [강화조약]에는 찬성, [安保條約]에는 절차상의 문제, 행정협정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였다. 中執委에서 결의한 결과 우파의 원안을 채택하였는데 10월 23일부터 개최된 제8회 임시대회에서 양조약을 반대하는 좌파와 대립되면서 양파는 완전 분열되었다. 이 때의 國會세력 분포는 우파는 중의원 29명, 참의원 31명이었고, 좌파는 중의원 16명, 참의원 31명이었다.<sup>21)</sup>

#### IV. 再統一의 力學

右派社會黨은 분열 후 처음으로 1952년 1월 제9회 당대회를 개최하여 民主社會主

18) 배성동, "일본의 외교정책", 윤근식(편), 「현대정치와 정치·경제학적 분석」(서울: 법문사, 1988), pp. 313~324.

19) 楠精一郎(外) 共著, op. cit.

20) 吉田忠雄(外) 共著, op. cit., pp. 36~50.

21) 權橋勝信, "こわが社會黨だ" 高富通敏(編), 「社會黨: 萬年野黨から抜け出せるか」(東京: 岩波書店, 1989), pp. 43~80.

義 노선을 명확히 하였다. 인맥은 변함없이 舊日勞系(河上派), 舊社民系(西尾派)가 존속되었다.<sup>22)</sup> 강화문제에 대해서는 좌파와 대항상 우파는 중간파와 타협하여 본의 아니게 이를 인정함으로써 安全保障問題에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결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파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舊日勞系였다. 舊社民系는 片山·戸田 연립내각의 실패의 책임을 지고, 講和를 계기로 복당된 河野密, 三輪壽壯 등 舊日勞系가 집행부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52년 제10회 임시 당대회에서는 委員長에 河上이 취임하는 것을 舊社民系가 양해하였다.

우파의 外交·安全保障에 관한 주장은 1953년 1월의 제11회 당대회와 1954년 1월의 12회 당대회에서 채택된 [運動方針]에서 그 개요를 알 수 있다. 양파의 공통점은 좌파의 [平和4原則]이 無防衛中立主義를 선언하여 국제연대주의를 제창하는 한편, 어느 정도의 自衛力을 긍정한다는 것이었다. 즉 日本의 안전보장은 UN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좌파는 中立主義를 黨是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분열전 사회당이 당초 구상하고 있었던 永世中立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좌파가 제창한 중립주의에 있어서 단독 강화는 미국, 서구진영에 일방적으로 가담한다 하여 거부되었다. 결국 강화조약 체결 후에 중립주의 주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에 대한 從屬關係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54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양파는 [統一促進委員會]를 설치하여 양파간에 의견 조정을 진행하였고, 11월에는 (1) 상호안전보장 원조정책과 징병제에 반대한다. (2) 현재 자위대 증강에는 찬성하지만 그 규모를 축소한다. (3) 국내치안에 있어서는 민주적이고 기동력있는 경비조직을 구성한다 라는 新政策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협상은 통일신중파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때 舊山內閣이 성립되어 양파통합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는데 양파 공히 舊山봄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다가올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舊山の 公約인 憲法改正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양파가 통일해서 發議權을 保守진영에게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955년 1월 18일 양파는 [社會黨統一實現에 관한 決議案]을 채택하였다. 또한 2월 총선거에서는 당세상승을 배경으로 교섭을 추진하였고, 동년 10월 13일에 統一大會를 개최하여 保守合同에 앞서 양파 사회당의 再統一이 실현됨으로써 統一社會黨이 탄생되었다.

22) 社會黨, 「社會黨의 現實과 未來」(東京: 日本社會黨出版部, 1987)

그런데 양파 사회당내의 통일신중파는 통일교섭에 제동을 걸어왔다. 우파내의 西尾派가 이 세력을 대표하고 있었다. 安全保障問題에 관해 [안보조약]을 승인하면서 최소한의 軍備를 긍정하는 西尾派의 주장은 안보조약·재군비에도 반대하는 河上派와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西尾派는 1954년 5월 6일 [社會黨統一問題에의 考察]이라는 논문을 당내에 배포, 양파의 세계관·외교·방위문제에 대한 정책의 相違함을 지적하여, 無原理·無原則의 統一에는 반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西尾의 통일신중론의 배경에는 1954년 4월의 [全勞會議]의 結成이 있었다. [全勞會議]는 海運組合, 全映演, 全織同盟과 總同盟 등이 중심이었는데 總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하는 우파의 통일논의에 큰 制約을 가하였다.

좌파내부에서는 [統一綱領]이 현실성이 없다는데 불쾌했던 [向坂社會主義協會]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좌파 강령 작성시 주류의 鈴木派를 지지했던 野講·和田의 양파도 통합후 사회당에 있어 鈴木派가 패권을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양파가 이러한 내부에 깔려 있는 반발을 제압하고 통일에 성공하는 것은 매스컴의 지원에 따른 우파의 '재군비반대', 좌파의 '제삼세력론'이라 하여 통합을 추진한 主流派가 주장하는 原則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統一社會黨의 安全保障政策을 보면 "우리들은 평화에 대한 폭넓은 국민운동을 배경으로 외교정책을 마련하고, 완전한 經濟自立을 달성하며, 영토주권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規定해 일본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sup>23)</sup>

이처럼 講和問題에 대한 대립을 계기로 1952년에 분할된 좌우양파의 사회당은 1954년부터 통일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동서 양진영의 분쟁이 개입되지 않는 自主獨立外交를 추진하며,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中·蘇와 개별적으로 불가침협정을 피하면서 미·일·중·소를 포함한 集團的 불가침조약과 安全保障政策을 체결한다<sup>24)</sup>는 당의 노선이 확립되게 되었다.

## V. 西尾問題와 安保改正問題

양파는 統一에 대해 중지를 모아 1955년 11월 5일 合黨하였고, 자유·민주 양단은

23) 淺井基文, "外交「社會黨의 安全保障政策」에 提言する, 高富通敏(編), op. cit., pp. 239~270.

24) 韓英鳩, "日本革新黨 및 日本共產黨의 對外關係와 對韓半島政策", 현대 일본연구회(편) (서울: 법문사, 1990), pp. 154~155.

自由民主黨을 창당하였다. 소위 自·社 兩大 政黨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sup>25)</sup>

이 무렵 院外에서는 基地反對鬭爭이 격렬하게 일기 시작했다. 특히 그해 시작된 砂川투쟁이 그 도화선이 되었다. 砂川鬭爭은 당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던 대량보복 전략<sup>26)</sup>의 일환으로 주일미군기지를 강화·확충하려고 시작된 東京都下砂川基地의 비행장 확충공사를 반대하는 것에서 야기된 것이다. 1952년 5월의 内灘鬭爭 이래 일련의 基地反對鬭爭은 在派社會黨의 지도이념의 기본적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양과 合黨 후의 砂川鬭爭(제2차)에서는 지금까지의 右派社會黨에 속해 있던 국회의원까지도 실력저지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左右 양파의 통일로 2大政黨이 실현되자 온건화의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회당은 반대로 국회 내외에서 전투적 자세를 강화하였다.

1955년의 통일 후 처음으로 개최된 57년의 제13회 黨大會에서는 左傾化와 침예화의 경향이 한층 명확하게 표출되었다. 우선 [大會運動方針小委員會]에서 河上派의 河野密이 기초했던 57년의 [運動方針案]에 대해 左右 양파는 뚜렷한 차이점이 없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양 修正案은 형가리 동란과 生産性 向上運動 평가에 대해서 대립하는 듯 하였으나 68명 중 41명의 찬성으로 동 [委員會]에서 좌파 수정안을 가결하고 대회의 [運動方針]으로 채택했다. 이 [運動方針]에는 安保條約의 폐기와 日·中 국교회복, 그리고 1960년의 안조개정저지투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社會黨과 勞動黨의 합당이 승인되었다.

1956년 12월 鳩山内閣이 붕괴되고 石橋内閣이 성립됐으나 동 内閣은 石橋의 病患으로 인해 불과 2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고 1957년 2월 岸信介가 내각을 조각했다. 岸内閣은 당초 鳩山·石橋 양 内閣의 中·蘇 접근 정책을 계승하였고 특별히 東南亞細亞 정책에 치중하였다. 對美政策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촉진을 통해 대미관계를 대등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sup>27)</sup> 특히 6월에 방미했던 岸수상은

25) 이와 같은 정당체제 (party system)를 일본학자들은 대체로 "55년體制"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체제가 굳어진 국내외적 배경으로는 국제적 환경으로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따른 동서대립이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고, 국내정치도 이데올로기와 색체가 질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26) 아이젠하워와 덜레스의 세계정책과 더불어 전개된 세계전략을 말한다. 이것은 자국이 우월하다고 믿는 핵무기의 대량개발과 군사동맹의 확대를 통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량보복력을 행사한다"라는 전략구상으로써, 그 목적은 공산세력의 팽창을 방지하며 동맹국을 동원하는데 두고 있다.

27) 김욱렬,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 박준홍(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서울: 박영사, 1918), pp. 226~241.

“日·美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日·美共同聲明〕을 발표하였다. 이〔共同聲明〕에 따라 8월 6일에는 안전보장을 살펴보고 일·미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함에 따른 안전보장에 관한〔日·美委員會〕를 발족시켰다.

한편 社會黨은 岸內閣이 親美反共外交政策을 표방하자 모든 나라와 우호를 깊이 하겠다던 정신에 입각하여 4월에 淺沼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訪美團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中·蘇양국은 사회당의 외교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나 미국은 극히 냉담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후 社會黨은 중·소 접근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sup>28)</sup>

1958년 2월의 제14회 黨大會에서 통일 이래 左傾化 일변도를 택했던 사회당의 정책을 수정하려는 西尾派 및 全勞系의 대의원들이〔運動方針案〕의 수정을 주장하고 나서자 당내에서 의견이 양분되었다. 그 무렵 전노계 간부들은 대회에 앞서〔社會黨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여 겨우 8개 항목의 ‘귀당 1958년도 운동방침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고〔運動方針〕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4회 당대회에서는 대의원 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좌파의 힘에 밀려 두 파의〔運動方針〕의 수정 제기문제는 부결되었다.

제14회 黨大會 후 1958년 5월 22일 兩大政黨下에서 최초의 제28회 중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社會黨은 兩大政黨에 의한 정권교체에 의해 양파 사회당의 통일에 효과를 기대하여 약 30석의 의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예상외로 나타나 自民黨(自由, 民主合計)은 기존의 297석, 투표율 63.2%에서 287석, 57.8%로 약간 감소되었지만 社會黨(左派, 右派 勞農合計)은 기존의 160석, 투표율 30.25%에서 166석, 득표율 32.9%로 불과 6개 의석을 증가시켜 3% 증가에 그쳤다. 兩大政黨時代가 도래하여 재차 정권획득을 하려 했던 꿈은 한숨에 사라져 버렸다.<sup>29)</sup> 그 결과 또다시 ‘森戶·稻村論爭’이래 국민정당이 곧 階級政黨이라고 말해 ‘黨再建論爭’이 전개되게 되었다.

우선, 西尾未廣은 당 집행부의 주체성을 확립해 국민정당이란 骨格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12월 10일의 西未의〔昭電事件〕無罪確定祝賀會의 석상에서 西尾는 인사말로 國民政黨의 지론을 반박하고 金門, 馬相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국제긴장의 장본인은 中共이라고 강조하였다.

28) 방중단은 모택동, 주은래 등 중국측 고위인사들과 회담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방소단도 동일한 성과를 얻었지만, 방미단은 격이 떨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29) 楠精一郎(外) 共著, op. cit., p. 127.

이에 대해 좌파 總評 幹部와 사회주의 協會派에 속하는 당원그룹은 西尾派에 대해 격렬한 공세를 취하였다. 먼저 總評의 太田蕙와 岩井章, 協會의 向坂逸郎과 木原實의 제안에 따라 [社會黨 強化委員會]를 結成하여 총평조합원 등 젊은 당원을 결집한 당내 좌파의 일대 거점을 만들었다.<sup>30)</sup> 1959년 4월의 통일지방선거에서 東京, 大阪, 福岡, 北海島, 山梨, 示奈川, 茶城 등의 각 지방에서 패배했고, 계속되는 6월의 참의원선거에서도 부진을 면치못하여 사회당내에서는 재건논쟁이 가열화되었는데, 그 초점은 의식적으로 西尾 개인에게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6일부터 제16회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青年部는 대회 전날 관례로 되어있는 [青年大會]에서 98대 21로 西尾제명 결의안과 西尾를 통제위원회에 회부하는 決議案을 제출하였다. 전자는 부결되었고 후자는 37대 17, 기권 13으로 가결되었다. 대회에 상정되었던 西尾 통제위반 사항이란 (1) 安保問題에 대해서 조건투쟁을 소리높여 외쳐 놓고 새로운 일본의 안전보장에 어떤 형태든 미군 주둔의 필요함을 역설한 것. (2) 일·중 협력위원회의 위원이지만 同會는 당의 방침에 반해서 중국정권을 인정치 않고 대만정권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黨員이라 하여 이 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3) 西尾가 출석하여 결성한 纖維지부는 당규약을 위반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등이었다. 이 決議案은 결국 대회에서 344대 327, 무효 2표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黨大會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西尾派는 [재건동지회]를 만들어 10월 18일에 社會黨을 탈당하였다. 그 후 이것이 河上派의 일부도 가세하여 新黨결성을 결의하고, 1960년 1월 24일에 결성하여 당명을 '民主社會黨'이라고 명명하였다.<sup>31)</sup> 위원장에 西尾未廣, 서기장 會你益, 국회의원단장 水谷長三郎으로 구성되었다. 의회 세력분포는 중의원에 37석, 참의원에 16석을 확보하였다. 이리하여 사회당내에서는 지역적 집단보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일·미안보조약]을 개정하지는 세력이 소멸되었다. 한국전쟁 이래 지속되어온 지역적 집단안보보장은 비무장중립과 대립되는 '삼호·도촌논쟁'이후, 계속되던 노선론쟁도 결말을 보게 하였다.

민사당 결성 후인 1960년 3월 23일 제17회 임시 당대회가 개최되어 신위원장에 淺沼稻次郎이 취임하였다. 천소는 본래는 하상파에 속했으나 1959년 제2차 방중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동선언]에서 "미제국주의는 일·중 공동의 적"이라 발

30) 石川直登, "社會黨四十年の歩み", 高富通敏(編), op. cit., pp. 17~26.

31) 小林良彰, "民社黨の安全保障政策", 池井優(編), op. cit., pp. 123~132.

언한 이래 鈴木파에 접근하였다.<sup>32)</sup> 西尾파가 분열할 때에 몇몇을 제외한 하상파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는데도 천소는 강력하게 잔류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보개정문제에 대해서 1958년 9월의 鳩山の상과 델레스 국무장관에 의해 구체적인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1959년 3월에는 [안보조약 개정저지 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동회의에서 총평·사회당은 여타 原水協, 일·중 우호협회 등 13개 단체를 간사단체와 133개의 실행단체로 구성하였다. 이 조직의 반대운동 투쟁방법은 1958년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반대투쟁에 집중되었으나 이 투쟁에 반대한 [금로]와 [신산별]<sup>33)</sup>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1958년 11월 17일 중국의 진의 외교부장은 '일본중립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월 2일 소련의상 그로미코도 중립화를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중립주의를 부정하고 있던 일본공산당도 이에 호응해서 12월 10일 중앙위원회 간부회 성명은 "일본인민의 독립과 안전의 길은 일본의 외교정책을 대미종속으로부터 자주적인 중립정책으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1959년 1월 제4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일본 중립에 대한 당의 태도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어 종래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당은 일본공산당의 중립화정책을 단순히 전술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국 양당간의 거리를 크게 축소시켰다. 사회당은 안보개정저지행동을 위한 대정부질문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안보조약개정은 일본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인전에 국회 심의를 거쳐 총선거를 단행,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다.<sup>34)</sup> 岸내각은 당내에 있어서 통제력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해산을 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사회당은 원외투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감소되었다.

이 원외 대중투쟁은 안보의 국회심의가 시작한 때에 처음으로 고양되기 시작했으나 岸내각은 예정되어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일의 1개월전에 조약의 중의원 통과를 알게 되었다하여 1960년 5월 19일 자민당 단독 체결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그 날 이후 원외투쟁은 과거에 비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조약]은 6월 17일에 자연스럽게 승인이 성립되어 岸내각은 또다시 퇴진을 하게 되었다. 사회당은

32) 楠精一郎(外) 共著, op. cit., p127.

33) 전후 일본의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는 김용서, "戰後日本勞動運動의 형성과정: 혁명에의 도전과 체제측의 응전", 현대일본연구회(編), op. cit., pp. 123~132.

34) Ibid., p. 128.

뒤에 안보관계의 평가와 반성과정에서 구조개혁 노선이 등장해 대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비무장중립론]을 가지고 안보투쟁을 통한 부동의 지위를 형성해 마침내 당내 논쟁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 VI. 結 論

일본 헌법에서 안전보장의 논리는 전문의 국제연대주의(U·N중심주의)와 제9조의 전쟁포기조항이 일체를 이루면서 성립되었다. 점령초기의 일본사회당의 안전보장정책 즉, 비무장중립과 보편적 U·N집단안전보장의 구상은 이러한 헌법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이러한 보편적인 U·N의 집단안전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것을 대신할 세력균형론의 가부를 둘러싼 2개의 입장이 생기게 되었다. 그 하나는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편적 U·N 집단안전보장에 대해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을 취하려는 입장인 것이다. 이 입장은 현실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체제에의 참가와 중립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국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안전보장 조약을 맺자는 이상 상대방에만 방위조약책임을 요구하며 일본이 비무장으로 있는 것은 아니되며 사실상 도리에도 안맞는 것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의 자위력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요컨대, 비무장 중립을 주장하여 군사적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평화주의적 외교자세를 추구해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당은 강화문제를 둘러싼 양파간의 합의에 의해 재통일되었던 것이다.

1960년 1월 민사당 결당을 계기로 사회당에 있어서 안전보장정책에 의한 기본적 대립은 해소되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예를 들 것도 없이 국제관계의 권력정치의 현실을 인정, 지역적 안전보장을 긍정하는 입장은 자유세계의 사회주의 정당에 있어서 오히려 다수파가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우선 당내에 있어 우파의 리더수비는 片山·戸田내각의 실패이후 저하되었는데 우파의 리더쉽을 회복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 2 차 대전 후의 특수한 국제환경은 일본사회주의 운동에 독특한 길을 걷도록 하였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지리적으로 세계 타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적어도 미군 점령하에서는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동아시아에 있어 압도적인 힘을 과시한 미군의 우산밑에 외부 세계로부터 가해지

는 군사적 위협을 감지못해 폐쇄적 고립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에서는 “마르크주의의 조국 소련”, “혁명 중국”으로 미화하려는 신화가 의심의 여지없이 확산·지속되어 평화주의와 비무장중립이 실현 능한 이상이라고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제관계를 권력정치의 시각으로 돌려 세력균형의 입장에 서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을 고찰한다는 발상은 신헌법에 명시된 국제연대주의와 평화주의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권력주의적·반동적·제국주의적 야심을 갖춘 반사회주의적 사고라 하여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근원에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있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패권을 잡으려는 현실주의보다 이상주의적 중립주의가 보다 더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패전경험에서의 군사력에 대한 거부 반응과 주일미군의 반발에 기인하는 민족주의는 중립주의를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사회당과 역대 보수당 정권의 안보정책에 큰 격차를 야기시켜 그 결과 일본외교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유연한 대응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매우 격렬한 정치적 마찰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